

건물만 짓고 주차타워는 방치...인근은 '주차 전쟁'

건축허가 위해 만든 주차타워, 인력·관리 핑계 가동 안해 흉물 전략 광주 신용동 일대 주차타워 10 곳 중 한곳만 가동...관리감독 시급

22일 오후께 찾은 광주시 북구 신용동, 점심때를 넘긴 시간이었지만 이 일대 도로는 주·정차된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주차 자리를 찾는 차량들이 서행하는 탓에 뒤따르던 차량들은 경적을 울려 대고 보행자들은 불안한 상태로 길을 걷는 등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회사원 김인영(32)씨는 "주차할 곳이 없어 벌써 이 일대를 다섯 바퀴는 돌았다"며 "건물마다 기계식 주차타워가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 상인과 방문객 차량 모두 도로에 세워둘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다.

건축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넓은 대지가 필요한 지면 주차장 대신 '기계식 주차타워'를 세워 최종 허가를 받았음에도, 타워 운영 인건비와 고장 등을 이유로 가동하지 않으면서 주차난과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4~5층 규모의 건물들로서, 이 곳을 찾는 사람이나 유동인구 등에 따른 주차 수요가 상당량 발생함에도 주차타워를 가동하지 않으면서 주차장이 아예 없는 건물이나 마천가 지인 셈이다.

현행법상 건축주가 준공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면적 수준에 맞는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지면 주차장 대신 기계식 주차타워로 법적 기준을 맞춰 놓고도 가동하지 않고 있는 만큼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일명 '침전2지구'라 불리는 북구 신용동에 기계식 주차장을 두고 있는 건

물은 총 16개.

북구 내에서 비교적 신도시에 속하는 이 곳은 주차타워를 두고 있는 곳이 다른 구도심에 견줘 많다. 건축주들은 현행 주차장법에 따라 건물을 지으려면 시설면적 134㎡당 차량 1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한다. 과거에는 시설면적 500㎡ 미만의 경우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됐지만, 차량대수 증가 등으로 90년대 이후 관련 법규가 강화됐다. 하지만 땅값이 비싸지고 대지를 구하기도 어려워지면서 지상 주차장 대신 기계식 주차타워로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기계식 주차장은 차량 3~4대가 주차할 수 있는 토지 면적에 많게는 14대까지 주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관리자를 뒤야 하고 안전사고 문제 등으로 실제 운영하는 곳은 드문 상황이다.

신용동의 연면적 2046㎡의 A건물(1종 근린시설)만 하더라도 구청에 준공 신고를 하면서 지상에 1면, 기계식 주차장 14면의 주차장 확보했다며 승인 받았지만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또 다른 연면적 2011㎡ 규모의 B건물의 경우에도 지상 5면, 기계식 주차장 10대 외부에 노출된 기계식 주차타워 특성상 녹슬고 빛바래 흉물로 전략해 있었다.

한 건물 주차타워 입구에는 말뚝이 2개가 박혀져 있었다. 입구는 인근 학원생들의 자전거 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 다른 주차타워는 가동을 중단한 지 오래된 듯 곳곳에 먼지가 쌓여있었고, 차량



22일 오후께 광주시 북구 신용동 일대 건물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타워가 녹슬고 빛바래 방치돼 있는가 하면(왼쪽), 입구가 차량으로 가로막힌 채 가동되지 않고 있다.



한대가 입구를 가로 막고 있었다.

결국 기계식 주차장이 건축 허가를 위한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다 못한 시민들의 민원도 접수됐지만 전혀 바뀌지 않았다. 한 민원인은 북구청에 "기계식 주차장 쓰지도 못하면서 건물마다 설치한 것 이해가 안된

다. 흉물로 변했다. 차라리 이 부지에 차량 3~4대를 주차하는 게 이득"이라는 민원을 냈다.

북구청은 해당 민원인에 대해 "기계식 주차장 운영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미운영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을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광주일보가 둘러본 신용동 내 기계식주

차장 운영 실태만 보더라도 북구청의 관리 감독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백승권 광주교통문화연구원 부장은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했다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주의 협조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

어깨 펴는(?) 확진자들

적oin 취급 받던 과거와 달라...여행·모임 계획 움직임 활발

전문가들 "재감염 우려 주의해야"

"코로나에 걸리고 나니 다시는 안 걸릴 것 같아 친구들과 여행을 가야겠어요."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던 확진자들이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개인 동선까지 죄다 털리며 적oin 취급을 받던 3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아예 코로나 확진으로 면역력을 갖춘 이른바 '수퍼항체'가 생겼으며 오히려 자신있게 외부 활동에 나서시는 모양새다.

22일 자정 기준 광주·전남의 누적 코로나 확진자는 총 51만여명(광주26만여명, 전남 25만여명)을 돌파했다. 광주·전남 인구의 6분의 1 수준으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200만명이 직·간접적으로 코로나 확진자와 동거하는 셈이다.

여기에 지난 21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8인까지 늘어 거리 두기가 완화되자,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단체 모임을 계획하는 움직임이 많아

지고 있다.

백신 접종후 형성된 면역력과 감염으로 생긴 면역이 합쳐지면서 무적의 수퍼항체가 생겨났다는 말이 돌면서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코로나에 빨리 걸리는 게 나을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일주일 자가격리 해제 끝, 이제 수퍼항체보유자"라는 글을 올린 지역민들도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코로나 확진 후 격리가 해제 됐더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격리에서 풀린 뒤 며칠동안은 남은 바이러스를 퍼트릴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백신을 맞은 경우 확진 후 자연 면역력까지 생기면 면역력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바이러스가 전파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며 "재감염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도 있는 만큼 고위험군과의 접촉 등을 비롯해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호남 아파트 건설현장 여전히 안전 취약

익산국토청 22곳 긴급안전점검서 309건 적발

광주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해도 호남지역의 건설현장은 여전히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월에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유사 규모의 아파트 건설현장 22곳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1월 24일~3월4일)한 결과 총 309건을 적발했다.

아파트 건설현장 1곳당 14건의 안전사항을 위반한 꼴이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정기안전점검보고서 미제출,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서 미승인에도 불구하고 시공, 품질관리 소홀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도 적발돼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익산국토청은 호남권 관내 건설현장의 산업 재해를 줄이고 건설공사의 안전·품질 확보를 위해, 도로·수자원·철도 및 초고층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610개소를 선정하는 등 '2022년 건설현장 고강도

점검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점검대상은 전년대비(530곳) 15% 확대됐다.

점검 대상은 해빙기(3~4월) 동결·융해, 우기(5~6월) 집중호우 및 동결기(11~12월) 콘크리트 품질·화재사고 등 계절별 취약 공종 210곳과 관내 사망사고의 40%를 차지하는 50억원 미만의 민간 소규모 건설공사 및 공공 발주 사업 등 282곳이며,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상시 점검한다.

또,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유사한 고층 아파트, 건축물 해체현장, 타워크레인 및 물류창고와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 등 잠재된 위험요소가 있는 현장 118곳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호남권 건설현장의 선제적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경력자 국민감시단(24명)을 통해 민간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컨설팅을 확대 운영(120~240곳)하고, 공공 소규모 건설현장에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는 예방형 안전교육도 시행(60곳)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논밭두렁 태우기·쓰레기 소각 주의 5년간 산림화재 원인의 45% 차지

농번기를 맞아 논·밭두렁 태우기와 비닐 태우기 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림화재는 2109건으로 전체 산림화재의 44.9%를 차지했다.

산림화재의 구체적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이 1053건으로 22.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태우기 496건(10.5%)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산불로 인한 32명이 숨지고, 185명이 다쳤다. 지난해에는 논·밭두렁태우기와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2명이 사망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번질 경우 형법에 따라 실화죄로 처벌된다.

쓰레기 등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야외 불법 소각은 화재로 번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기환경 오염요인"이라며 소각행위 자체를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